

광주 국비 확보 성과 놓고 미묘한 신경전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광주시 관련 예산 확보를 놓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에 섬부른 '공다툼'이 벌어져 눈총을 받았다.

이 같은 신경전에는 3선을 노리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력한 광주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운태·이용섭 의원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자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플라스틱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차세대 LED 조명사

업인 OLED 조명 사업에 내년도 국비 예산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직접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도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가 역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

주연구개발(R&D) 특구 지정 및 육성 예산 50억원과 ▲전남대 동아시아 녹색성장 교육센터 건립 설계 예산 8억1천100만원을 반영시켜 사업의 물꼬를 뚫으며, 계속사업인 ▲진

곡산단 진입도로 건설 예산 149억 원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예산 90억원 등을 2010년 정부 예산안에 각각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이 광주

시에 알려지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모두 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며 "전남도의 국회의원들은 조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두 의원은 광주시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모두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광주시에서도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경전 소식을 전해 들은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선거때문에 벌써부터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라며 "예산 확보 결과를 놓고 스스로 공지사 하는 것이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내년 5·18 30주년 관련 예산 11억 반영

민주 조명택의원 밝혀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관련 예산이 정부의 막판 심의에서 일부 반영됐다.

29일 국회 문방위원회 소속 조명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이 요청한 내년도 5·18 30주년 사업 예산 25억8천여만원 가운데 11억여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

켰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전야제 예산(2억원), 대동한미당 예산(2억원), 문화예술제(1억5천만원), 30주년 기념 우표 발행(1억원), 인권평화음악제(1억5천만원), 10대 도시 순회사진전(1억원), 다큐멘터리 및 영화제작(1억8천500만원) 등이다.

그러나 5월 예술제 개최, 아시아시 민음악제, 30주년 화보집 발간, 30주년 기념영상물 제작 사업 등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윤영기자 tuim@



전남도-인도네시아 '자원개발' 협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9일 오후 전남도를 방문한 빨리우주(왼쪽에서 두번째) 인도네시아 술리웨시 주지사 일행과 도청 서재필실에서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의 우호와 자원개발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지하철 고객만족도 '전국 최고'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사진)는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했다.

오행원 사장은 "앞으로도 광주

지하철의 주인은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펼쳐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4월2일부터 8월21까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광주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윤영기자 penfoot@

지하철의 주인은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펼쳐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약보다 김치 Slicer Kimchi~!

김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선정

'2009광주김치문화축제' 김치산업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오세빈씨 등 6명이 제출한 '약보다 김치 Slicer Kimchi~!'가 선정됐다.

2009광주김치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29일 "김치산업콘텐츠 아이디어를 공모해 응모작 총 131편

수 있도록 디자인한 작품이다.

최우수상에는 '알짜배기'라는 순우리말 브랜드명을 기초로 디자인한 쇠세례·김식지·박슬비씨의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 최상급 문화상품 알짜배기 김치'와 양배추 김치에 견과류를 곁들인 정보문씨의 '견과류를 삼킨 양배추'가 선정됐다.

대상작 '약보다 김치 Slicer Kimchi~!'는 캡슐형태의 알약을 모티브로 김치를 꺼내지 않고 포장용기에서 곧바로 김치를 자를

/윤영기자 penfoot@

"대화엔 대화, 제재엔 핵으로"

■ 北 박길연 유엔 연설

“美 대북정책 변화 중요”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상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화에는 대화로, 제재에는 핵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병행하면서 대화에 나설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6자 회담 재개 전 북·미 양자대화를 위한 의견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우리의 핵무기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재는 결코 인정되지도 접수되지도 않

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부상은 "미국이 핵 정책을 변경 시키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 보유로 지역의 핵 균형을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으며,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구조를 버리고 최근에 여러번 전명한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북과 남 사이에는 유엔 총회가 인정하고 지지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겨 서로의 관계에서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김정일 장군의 결단에 의해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기 것"이라고 주목했다.

그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등 북남 경제협력이 다시 제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北 현법 '공산주의' 삭제

국방위원장은 최고영도자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했다.

최근 공개된 북한 신(新)헌법은 현재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조약 비준·폐기권, 특사권 행사 등 6개항의 임무와 권한을 적시해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원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3개 조항에 걸쳐 있던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구현법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중략)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40조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중략)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후략)'에서 각각 '공산주의' 단어를 지웠다.

또 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중략) 공산주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의

'공산주의 새 인간'이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조항들도 적지 않다. 59조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중략) 혁명의 전취물을 보유하는 데 있다'는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해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데 있다'로 개정됐다.

구현법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는 106조로 이관되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로 표현이 달라졌다.

신현법 3조는 기존 헌법 조항에 '선군사상'을 추가해 "공화국은(중략) 주체사상, 선군사상을(중략)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했고 4조는 "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있다"다. 기존 조항에 '군인'을 추가했다.

/연합뉴스